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식

“의사 집단진료거부 멈춰라”

이명연 의원,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등 대응해야”... 비상진료 대책 마련도 촉구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1, 환경복지위원장)은 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진료 거부 중단 및 비상 진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행하고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연간 400여 명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울 수 없으므로 정부가 나서 지역 의사 및 공공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 의료진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향상 등 국가지원을 늘리고 지역 의사제도와 건강보험 지역간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의 집단진료 거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공의 391명(인원 97, 레지던트 294) 중 평균

357명(91%)이 참여했고, 전임의는 99명 중 평균 20명(20.5%)이 참가한 상태다.

도내 전공의와 전임의 사직서 제출의 경우 지난 2일 기준 전공의 389명 중 301명(77.4%)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임의는 99명 중 38명(38.4%)이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의 경우 1차(8월 14일) 415개 기관(35.8%)이 참여했으나 2차(8월 26일) 28개(2.4%) 기관만이 참여, 387개(33.4%) 기관이 휴진을 철회해 업무개시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집단휴진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호상 기자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 과제도 반영돼야”

국주영은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한국판 뉴딜’ 전략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된 농업·농촌 과제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28개 세부과제를 발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계



획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자리 확보만을 위한 사업 나열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 농업·농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뉴딜 정책에서 배제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 뉴딜 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제는 스마트팜 조성,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 구축, 농촌 태양광 기술 개발 지원, 농어촌 마을 조속속 인터넷망 구축 등 4개 사업이 전부다.

이에 국 의원은 “농축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외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뉴딜 계획은

250만 농민들에게 오히려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준 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보를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문제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 전략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농업·농촌 과제의 한국판 뉴딜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이병도 의원 “범죄 취약계층에 방범 시설 설치 지원 필요”

김이재 의원 “코로나19 직격탄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해야”

3일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 더불어민주당)과 김이재 의원(전주4,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했다.

이병도 의원은 도내 침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침입 절도 범죄가 2017년 983건에서 2018년 1,307건, 2019년 1,479건으로 3년 전보다 약 50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범죄 예방환경 조성사업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집행 중이다 보니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심 저층 주거지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며 “하지만 도내 침입 범죄의 80%는 시 단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범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10호 이상의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원, 골목길 등 공공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수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범창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골목길에 CCTV가



이병도 의원



김이재 의원

아무리 많아도 개개인의 주거지에 방범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범죄 예방정책”이라며 “전북경찰청에서도 도가 저소득층 대상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역도 차원에서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며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꼭 필요한 민생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면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전

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표 발의해 현재 추진 중인 범죄 예방사업의 내용을 확대·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한적이나 이루어졌던 공연·전시회는 물론 예정된 대부분의 공연·전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만큼 추가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등록예술인은 2,174명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인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전북도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문화예술계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전북도 문화예술의 산과 역할을 해왔던 시설인 전북도예술회관이 좁은 주차장을 비롯해 시설의 노후화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주요 관객 역시 외면 받고 있다”며 “재정여건상 당장 신속이 어렵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속이나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국민·재정·금융으로 뉴딜 성공”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뉴딜 펀드’ 성공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재원 마련 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가 직접 투입하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분은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서 발표한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재원 마련 비전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설계,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향후 5년 간 총 170조원을 투입할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국비 1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 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총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펀드를 통해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펀드 등 3가지 유형의 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3가지 펀드의 이름을 포괄적으로 ‘뉴딜 펀드’로 정하되, 각 유형의 성격에 따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로 구분되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조성한 정책형 펀드(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활용하고, 나머지 영역을 민간 금융권과 일반 국민이 나눠서 맡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뉴시스

“간호사 격려 대통령 메시지가 잘못됐나?”

이용호 의원, “의료파업으로 의사들의 빈 자리 메우느라 더 힘들어져... 이간질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일 대통령 격려·응원 진영논리로 보고 정쟁 도구화 해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잘못됐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는 의사보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라며, “의료파업으로 의사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러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간호사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솜

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현실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며, “(SNS글은) 그 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를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고, 현행 의료법을 어기며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잘했다고 격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격려와 응원을 진영논리로 바라보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발로 된 가르기이자 이간질이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익산시의회 상임위원 발로 뛰는 현장행정 나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00회 임시회 중 내일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현장을 돌아보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백제왕궁역사관, 보석박물관, 종합운동장, 생활문화센터 대상지를 방문하여 조례안 심의에 따른 사전 현장 점검 및 사업 현황 파악에 매진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지, 춘포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사업지(울산양봉)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운영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사람 중심의 글로벌 마인드 대학!

WONKWANG UNIVERSITY

2021학년도 수시모집 : 2020. 9. 23(수) - 28(월)

다양한 선택! 또 한번의 기회!

자유로운 전공제도 운영 (의약학 제외)
사범대 내 복수전공 100% 가능

정부재정지원사업 총 1,890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 SW중심대학사업, LINC+사업 등 (2014-2024년 대학지원사업)

철도교통의 중심지

(수도권, 광주·전남) 왕복 KTX 88대, SRT 40대 1일 정차 (2020년 3월 기준)

장학금

60종류 이상의 다양한 장학금, 총 540억 지급 (대학정비공시기준)

고시

단과대학별 고시실 운영 (공무원, 소방관 및 공무원, 임용고시, 로스쿨 준비 가능)

기숙사

3,575명 (2020년 3월 기준) 기숙사 수용 가능(거주권)

유기적인 교내 상·취업 시스템 구축

진로설계센터, 경력·민간기업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학생부종합(의치한포함) 063-850-5266
수시, 학생부교과(일반) 063-850-5262